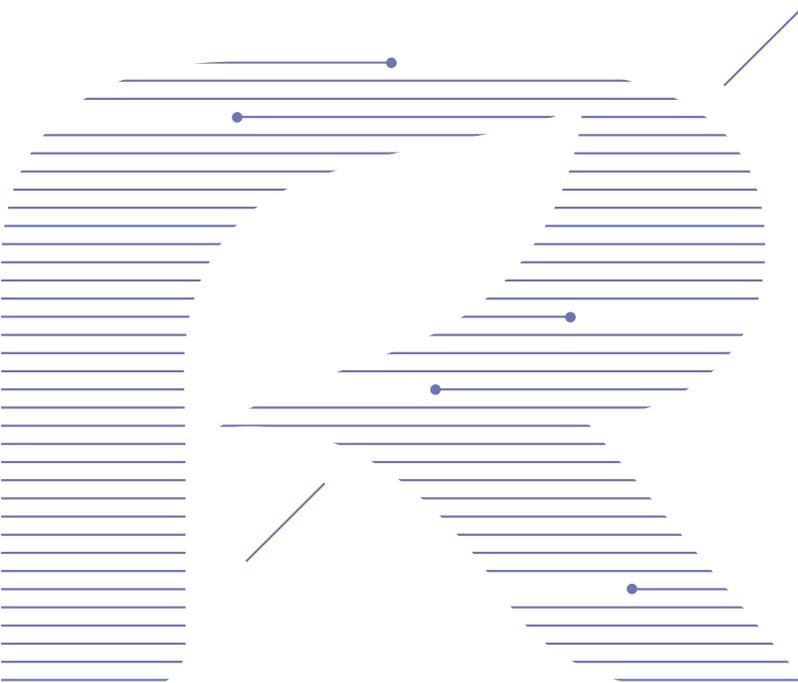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 부속 연구서

-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이지용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 부속 연구서

-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이지용



연구 담당

이지용 | 강원대학교 교수 | 연구 총괄

R2025-18 연구자료-2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 부속 연구서

-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5.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I S B N | 979-11-6149-822-5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1장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결과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분석 방법 4

3. 분석 자료 12

4. 분석 결과 26

5. 요약 및 시사점 41

부록 I **43**

부록 II **53**

참고문헌 **73**

제1장

<표 1-1> 논/벼 농가 응답자 특성 10

<표 1-2> 응답자 특성 13

<표 1-3> 첫 번째 제시금액별 응답 분포(농업재해보험) 14

<표 1-4> 첫 번째 제시금액별 응답 분포(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15

<표 1-5> 정보효과에 따른 그룹 간 특징 16

<표 1-6> 농업 소득 변동에 관한 소비자 인식 17

<표 1-7> 농업 소득 변동과 농산물 생산 감소의 관계성 18

<표 1-8>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관한 인식 19

<표 1-9> 농업재해보험 정책에 관한 인식 20

<표 1-10>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에 관한 인식 20

<표 1-11> 농업재해보험 정책 효과성에 관한 인식 21

<표 1-1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효과성에 관한 인식 22

<표 1-13> 농업 소득변동완화 정책의 국가 식량안보 확보에 관한
 소비자 인식 23

<표 1-14>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식품 물가안정에 관한 소비자 인식 ... 24

<표 1-15>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농촌사회 유지에 관한 소비자 인식 ... 25

<표 1-16> 농업재해보험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경제적 가치 28

<표 1-17>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경제적 가치 29

<표 1-18> 정책별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액(원) 30

<표 1-19> 농업 소득 변동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지불의사액(원) 31

<표 1-20>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인식 정도에 따른 지불의사액(원) 32

<표 1-21>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 인식에 따른 지불의사액(원) 34

〈표 1-22〉 연평균 지불의사액 및 2024년 기준 연간 총편익(가구 수 기준) …	34
〈표 1-23〉 경제성 분석 결과(가구 수 기준) ……………	36
〈표 1-24〉 정보제공에 따른 그룹별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치 변화 (농업재해보험) ……………	38
〈표 1-25〉 정보제공에 따른 그룹별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치 변화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	38
〈표 1-26〉 정보제공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사회적 기능 가치 변화 ……………	39
〈표 1-27〉 정보제공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사회적 기능 가치 변화 ……………	40

부록

〈부표 1-1〉 농업 심각성 인식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경제적 가치 ……………	43
〈부표 1-2〉 농업 심각성 인식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경제적 가치 ……………	44
〈부표 1-3〉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인식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경제적 가치 ……………	45
〈부표 1-4〉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인식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 경제적 가치 ……………	46
〈부표 1-5〉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 인식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경제적 가치 ……………	47
〈부표 1-6〉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 인식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 경제적 가치 ……………	48
〈부표 1-7〉 농업재해보험 정보효과 분석 결과(대조군 vs 처치군 1) ……………	49
〈부표 1-8〉 농업재해보험 정보효과 분석 결과(처치군 2 vs 처치군 3) ……………	50

〈부표 1-9〉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보효과 분석 결과 (대조군 vs 처치군 1)	51
〈부표 1-10〉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보효과 분석 결과 (처치군 2 vs 처치군 3)	52

1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결과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은 농가의 소득안정이라는 직접적 효과 이외에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간접적 효과가 존재한다(김태후 외, 2022).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농업생산자의 소득안정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는 농업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 중의 하나인 농산물 공급의 경제적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이 제공하는 농산물 공급의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WTO는 식량안보, 농촌사회 유지, 환경보전 등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며, FAO는 도시화 완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임형백·이성우, 2004).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크게 국가 식량안보, 가구 식량안보와 농촌사회 유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은 농업생산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제고에 기여한다.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은 농산물의 안정적 시장공급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에 이바지하며, 이는 소비 주체인 가구의 식품 지출안정을 통한 가구의 안정적 식량 확보에 도움을 준다. 또한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은 농촌의 주요 산업인 농업 유지를 통해 농촌사회 유지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 및 혜택과 관련한 연구는 현재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다(최경환 외, 2010; 박현희, 2014; 박기령, 2016; 김태후 외, 2022 등). 하지만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한 간접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이 제공하는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모두 포함한 전체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간접적 효과인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시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정책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효과인 간접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간접적 효과인 사회적 기능(국가 식량안보 확보, 식품 물가안정, 농촌사회 유지)에 대한 소비자 대상 경제적 가치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관한 정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가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농업 소득변동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농업재해보험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 번째로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경제적 가치추정을 통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분석하고자 한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인 국가 및 가구의 식량안보와 농촌사회 유지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관련 정책은 사회구성원에게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촌사회 유지를 통한 기능 제공 등 직접적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 제공 등의 간접적 가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재화 특성을 반영하고 관심 재화가 제공하는 직접적 가치와 간접적 가치를 동시에 추정하기 위한 가치추정 방법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두 번째로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관련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 가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에 따른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로 1) 식량안보 확보 효과, 2) 식품 물가안정 효과, 3) 농촌사회 유지 및 국가균형발전 효과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변화를 확인한다.

2. 분석 방법

2.1.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평가

본 연구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추정을 통하여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소비자 가치추정을 위하여 방법론적 유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 가치추정에 적용이 가능한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한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후생경제학 이론적 근간을 두고 있으며, 면접조사를 통하여 소비자가 비시장재화(Non-market Good)에 부여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이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은 비시장재적 특성을 가지며 직접적 가치와 간접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의한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을 기능별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시장자료(Market Data)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응답자의 의견을 묻기 때문에 실제 행동과는 다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응답자가 자신의 가치를 상당히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보여줄 수 있다(Fox et al., 1998; Cummings & Taylor, 1999).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설적 편의(Hypothetical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값싼 수다(Cheap Talk)와 결과 디자인(Consequentialty Design)을 동시에 적용한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공공재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내 적절한 시나리오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의 소득 불안정이 생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한 후, 농산물 생산 불안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사회적 효과(식량안보 확보 어려움,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촌사회 붕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 이후 농업 소득변동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농업재해보험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들 정책이 제공할 수 있는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1) 안정적 농산물 공급 유인을 통한 국가 식량안보 확보 및 2) 안정적 농산물 공급 유인을 통한 식품 물가안정, 3) 농업생산자 소득안정을 통한 농촌사회 유지에 대해 설명한다.¹⁾

경제적 가치추정을 위한 질문에서는 각 정책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가구당 비용에 관해 설명하고, 정책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당 비용만큼 증가한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조건부 가치평가법은 지불의사액 측정을 위하여 다양한 질문방식(개방형 질문, 경매법, 지불카드법, 양분선택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시장의 상황을 모방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질문방식보다 유인일치적(Incentive Compatible)으로 알려진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방식을 활용한다. 양분선택형 질문(Dichotomous Choice Question) 방식은 설문지에 설정된 금액에 대하여 응답자에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예/아니오’로 응답자가 대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양분선택형 질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의사결정 구조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인일치적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형 질문에서도 통계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질문법을 활용한다(Hanemann et al., 1991; Holmquist et al., 2012).

조건부 가치측정법에서 응답자가 밝히고자 하는 지불의사를 쉽게 드러낼 수 있

1) 명확한 설문지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각 사회적 기능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현재까지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객관적 기여 정도를 제시하기보다는 각 정책이 사회적 기능이 있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도록 지불수단(Payment Method)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의 공공재적 특성 및 응답자 결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가구당 세금의 증가’라는 지불수단을 제시하고, 지불방식은 향후 5년간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양분선택형 질문에서 최초 제시금액 선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가구당 예산 배분을 활용한다. 조건부 가치평가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설적 편의(Hypothetical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값싼 수다(Cheap Talk)와 결과 디자인(Consequentialty Design)을 경제적 가치평가 질문 이전에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조건부 가치평가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효과(scope effect)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이 응답자의 가치평가 대상임을 설문지에 명확하게 제시한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세금을 지불수단으로 선택하였고, 지불 단위는 가구, 응답 주체는 세금 지불능력을 지닌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설정한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재화적 특성으로 가구의 세금 구조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심 재화의 가구 기준 경제적 가치는 가장 보수적인 결과이다.

2.1.1.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치추정 대상인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해당 재화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가구원 수 등) 및 정책 및 기능에 대한 인식, 필요성, 정책효과에 관한 인식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WTP_i = \mathbf{X}_i\boldsymbol{\beta} + \varepsilon_i$$

여기서 WTP_i 는 관측 불가능한 i 번째 응답자의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를 의미하며, \mathbf{X}_i 는 i 번째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정책 및 사회적 기능과 관련한 인식,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변수 행벡터(Row Vector)를 의미한다. $\boldsymbol{\beta}$ 는 각 변수에 해당하는 회귀계수의 열벡터(Column Vector)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질문은 응답자별로 네 가지 답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각각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 첫 번째 질문에 ‘예’ 두 번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경우, 첫 번째 질문에 ‘아니오’, 두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 두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네 가지 경우이다(Hanemann et al., 1991). 네 가지 답변 가능성에 대한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id_i^1 = 1(\text{예}), Bid_i^2 = 0(\text{아니오})$$

$$\begin{aligned} \Pr(Bid_i^1 = 1, Bid_i^2 = 0 \mid \mathbf{X}_i) &= \Pr(t^1 \leq \mathbf{X}_i\boldsymbol{\beta} + \varepsilon_i < t^2) \\ &= \phi\left(\frac{\mathbf{X}_i\boldsymbol{\beta} - t^1}{\sigma}\right) - \phi\left(\frac{\mathbf{X}_i\boldsymbol{\beta} - t^2}{\sigma}\right) \end{aligned}$$

여기서 Bid_i^1 과 Bid_i^2 은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미한다. $\Pr(Bid_i^1 = 1, Bid_i^2 = 0 \mid \mathbf{X}_i)$ 는 응답자가 첫 번째 질문에 ‘예’, 두 번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할 조건부 확률을, t^1 과 t^2 은 무작위로 할당된 제시금액을, x_i 는 개인의 식별 가능한 특징들을 의미한다.

$$Bid_i^1 = 1(\text{예}), Bid_i^2 = 1(\text{예})$$

$$\begin{aligned} \Pr(Bid_i^1 = 1, Bid_i^2 = 1 \mid \mathbf{X}_i) &= \Pr(\mathbf{X}_i\boldsymbol{\beta} + \varepsilon_i > t^1, \mathbf{X}_i\boldsymbol{\beta} + \varepsilon_i \geq t^2) \\ &= \phi\left(\frac{\mathbf{X}_i\boldsymbol{\beta} - t^2}{\sigma}\right) \end{aligned}$$

여기서 $\Pr(Bid_i^1 = 1, Bid_i^2 = 1 \mid \mathbf{X}_i)$ 는 응답자가 첫 번째 질문에 ‘예’, 두 번째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Bid_i^1 = 0(\text{아니오}), Bid_i^2 = 1(\text{예})$$

$$\begin{aligned} \Pr(Bid_i^1 = 0, Bid_i^2 = 1 \mid \mathbf{X}_i) &= \Pr(t^2 \leq \mathbf{X}_i\boldsymbol{\beta} + \varepsilon_i < t^1) \\ &= \phi\left(\frac{\mathbf{X}_i\boldsymbol{\beta} - t^2}{\sigma}\right) - \phi\left(\frac{\mathbf{X}_i\boldsymbol{\beta} - t^1}{\sigma}\right) \end{aligned}$$

여기서 $\Pr(Bid_i^1 = 0, Bid_i^2 = 1 \mid \mathbf{X}_i)$ 는 응답자가 첫 번째 질문에 ‘아니오’, 두 번째 질문에는 ‘예’라고 답변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Bid_i^1 = 0(\text{아니오}), Bid_i^2 = 0(\text{아니오})$$

$$\begin{aligned} \Pr(Bid_i^1 = 0, Bid_i^2 = 0 \mid \mathbf{X}_i) &= \Pr(\mathbf{X}_i\boldsymbol{\beta} + \varepsilon_i < t^1, \mathbf{X}_i\boldsymbol{\beta} + \varepsilon_i < t^2) \\ &= 1 - \phi\left(\frac{\mathbf{X}_i\boldsymbol{\beta} - t^2}{\sigma}\right) \end{aligned}$$

여기서 $\Pr(Bid_i^1 = 0, Bid_i^2 = 0 \mid \mathbf{X}_i)$ 는 응답자가 첫 번째 질문에 ‘아니오’, 두 번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한다. 이상의 각 답변 가능성 확률을 바탕으로 다음의 로그우도 함수(Log-likelihood Function)를 구축할 수 있다.

$$\sum_{i=1}^N \pi_i^{ym} \ln \left(\phi \left(\frac{\mathbf{X}_i \boldsymbol{\beta} - t^1}{\sigma} \right) - \phi \left(\frac{\mathbf{X}_i \boldsymbol{\beta} - t^2}{\sigma} \right) \right) + \pi_i^{yy} \ln \left(\phi \left(\frac{\mathbf{X}_i \boldsymbol{\beta} - t^2}{\sigma} \right) \right) \\ + \pi_i^{ny} \ln \left(\phi \left(\frac{\mathbf{X}_i \boldsymbol{\beta} - t^2}{\sigma} \right) - \phi \left(\frac{\mathbf{X}_i \boldsymbol{\beta} - t^1}{\sigma} \right) \right) + \pi_i^{nm} \ln \left(1 - \phi \left(\frac{\mathbf{X}_i \boldsymbol{\beta} - t^2}{\sigma} \right) \right)$$

여기서 $\pi_i^{ym}, \pi_i^{yy}, \pi_i^{ny}, \pi_i^{nm}$ 은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의미하며,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나타낸다.

2.2. 정보제공에 따른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변화 분석

본 연구는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긍정적 영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변화 분석을 수행한다. 결과를 통하여 향후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정보제공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 정책이 제공하는 간접적 긍정적 효과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제공한다. 첫 번째 정보로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국가 식량안보 확보와 관련한 긍정적인 효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두 번째 정보효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가구의 식품지출 안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 번째 정보효과로 농업 유지에 따른 농촌사회 유지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정보제공의 기본구조는 각 효과에 관한 현재 국가 상황을 제시하고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

능이 현 상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성을 갖는 전국 단위 1,2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개의 대조군과 3개의 처치군으로 구분하여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 가치 변화를 확인한다. 대조군과 처치군 간 구조적 차이를 최소화하여 정보제공에 따른 명확한 소비자 가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정보는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부여된다. <표 1-1>은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 가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실험 디자인을 보여준다.

<표 1-1> 논/벼 농가 응답자 특성

구분	대조군	처치군 1	처치군 2	처치군 3
식량안보 효과	-	0	-	-
물기안정 효과	-	-	0	-
농촌사회 유지 효과	-	-	-	0
표본 수	300명	300명	300명	300명

자료: 저자 작성

2.2.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정보제공에 따른 관련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무작위 설문실험(Randomized Survey Experiment: RSE)을 활용한다.

무작위 실험의 특성을 활용하여 정보제공 유무에 따른 관련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변화와 관련한 비조건부 분석(Unconditional Analysis)과 조건부 분석(Conditional Analysis)을 수행한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대조그룹과 정보가 제공된 처치그룹 간의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경제적 가치 변화에 관한 기초통계량 비교를 통하여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 가치 변화를 분석한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관련한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 가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모형을 설정한다. 무작위 설문실험 특성을 이용하여 샘플 간(Between Sample) 회귀분석을 이용한 조건부 분석(Conditional Analysis)을 수행한다.

$$Y_i = \alpha + \beta_1 tret1_i + \beta_2 tret2_i + \beta_3 tret3_i + \mathbf{Z}_i\boldsymbol{\rho} + \varepsilon_i$$

여기서 Y_i 는 개별 소비자의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나타낸다. $tret1_i$ 는 정책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식량안보 향상 효과와 관련한 정보효과, $tret2_i$ 는 정책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물가안정을 통한 가구 지출안정 효과 관련한 정보효과, $tret3_i$ 는 정책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농촌사회 유지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보효과를 의미한다. \mathbf{Z}_i 는 소비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징(성별, 연령, 가구소득, 가구원 수, 교육수준 등)과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변수 벡터를 의미한다. 무작위 설문실험 특성상 각 정보효과의 계수는 대조군 대비 처치군의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변화 효과를 의미한다.

3. 분석 자료

3.1.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3.1.1. 응답자 특성

<표 1-2>는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관련 인식, 필요성 및 효과와 관련한 소비자 특성을 보여준다.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중 약 51%는 남성이며, 응답자 평균 연령대는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 수는 약 2.8명, 평균 월 가구소득은 500만~6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알지 못한다’로 답변하였다. 특히 ‘전혀 알지 못한다’ 답변 비율이 42.8%로 높게 나타났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알지 못한다’로 답변하였다. 관련 정책을 ‘전혀 알지 못한다’ 답변 비율은 22.7%로 나타났다. 농업재해보험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이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는 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농업재해보험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이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을 위해 효과적일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답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시행을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정책을 지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이 식량안보, 식품 물가, 농촌사회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알고 있다’로 답변하였다. 또한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이 식량안보 확보, 식품 물가안

정, 농촌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답변하였다. 농업재해보험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이 식량안보 확보, 식품 물가안정, 농촌사회 유지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각 정책이 각 사회적 기능을 유지에 ‘효과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표 1-2〉 응답자 특성

구분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성별	1=남성, 0=여성	0.508	0.500
연령	1=20~29 ~ 5=60~69	3.170	1.372
교육수준	1=고등학교 졸업 이하 ~ 3=대학원 재학/졸업	1.958	0.498
가구원 수	명	2.787	1.150
월 가구소득	1=200만 원 미만 ~ 10=1,000만 원 이상	4.916	2.592
농업재해보험 정책 인식수준	1=전혀 알지 못함 ~ 4=매우 잘 알고 있음	1.824	0.847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인식수준	1=전혀 알지 못함 ~ 4=매우 잘 알고 있음	2.096	0.776
농업재해보험 정책 필요성	1=전혀 필요하지 않음 ~ 5=매우 필요함	4.095	0.814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필요성	1=전혀 필요하지 않음 ~ 5=매우 필요함	4.199	0.795
농업재해보험 정책 효과성	1=전혀 효과 없음 ~ 5=매우 효과 있음	3.901	0.816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효과성	1=전혀 효과 없음 ~ 5=매우 효과 있음	4.003	0.798
농업재해보험 정책 지지의향	1=전혀 없음 ~ 5=매우 있음	3.983	0.84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지지의향	1=전혀 없음 ~ 5=매우 있음	4.047	0.852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1=전혀 알지 못함 ~ 4=매우 잘 알고 있음	2.875	0.794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1=전혀 알지 못함 ~ 4=매우 잘 알고 있음	2.965	0.801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1=전혀 알지 못함 ~ 4=매우 잘 알고 있음	2.899	0.794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1=전혀 동의하지 않음 ~ 5=매우 동의함	3.961	0.854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1=전혀 동의하지 않음 ~ 5=매우 동의함	4.143	0.836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1=전혀 동의하지 않음 ~ 5=매우 동의함	3.960	0.863
농업재해보험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1=전혀 효과 없음 ~ 5=매우 효과 있음	3.771	0.826
농업재해보험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1=전혀 효과 없음 ~ 5=매우 효과 있음	3.900	0.869
농업재해보험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1=전혀 효과 없음 ~ 5=매우 효과 있음	3.759	0.862

(계속)

구분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1=전혀 효과 없음~5=매우 효과 있음	3.852	0.811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1=전혀 효과 없음~5=매우 효과 있음	3.956	0.84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1=전혀 효과 없음~5=매우 효과 있음	3.800	0.853
표본 수	1,200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

3.1.2.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자 답변 분포

본 조사에서 활용한 양분선택형 질문은 주어진 정책별 예산 규모에 기초하여 설정된 4개의 초기가격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4개의 가격 비율은 응답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표 1-3>과 <표 1-4>는 설문에서 제시된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첫 번째 제시금액에 ‘예’ 응답 비율은 36,300원 가격에서 51.7%, 39,900원 가격에서 43.0%, 43,500원 가격에서 46.7%, 47,200원 가격에서 40.3%로 나타나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예’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져 경제이론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첫 번째 제시금액별 응답 분포(농업재해보험)

제시금액	표본 수	예		아니오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36,300원	300	155	51.7	145	48.3
39,900원	300	129	43.0	171	57.0
43,500원	300	140	46.7	160	53.3
47,200원	300	121	40.3	179	59.7
합계	1,200	545	45.4	655	54.6

자료: 저자 작성.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경우, 첫 번째 제시금액에 ‘예’ 응답 비율은 39,300원 가격에서 50.0%, 43,300원 가격에서 42.0%, 47,200원 가격에서 49.3%, 51,200원 가격에서 40.7%로 나타났다.

〈표 1-4〉 첫 번째 제시금액별 응답 분포(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제시금액	표본 수	예		아니오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39,300원	300	150	50.0	150	50.0
43,300원	300	126	42.0	174	58.0
47,200원	300	148	49.3	152	50.7
51,200원	300	122	40.7	178	59.3
합계	1,200	546	45.5	654	54.5

자료: 저자 작성.

3.2. 정보제공에 따른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변화

3.2.1. 정보제공 그룹 간 응답자 특성

본 연구는 전국 단위 1,2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평가한다. 특히 정책 시행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긍정적 효과에 관한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 가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책 시행으로 나타나는 간접적 효과와 관련한 세 가지 정보를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정보의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그룹(대조군)과 정보를 제공받은 그룹 간(처치군)의 응답자 특성을 확인하였다. <표 1-5>는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과 정책 시행으로 나타나는 간접적 효과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은 3개의 처치군의 응답자 특성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대조군과 처치군 간의 응답자 특성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의 무작위 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룹 간의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변수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보효과에 대한 분석은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한 조건부 분석(Conditional Analysis)을 추가로 수행하여 결과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표 1-5〉 정보효과에 따른 그룹 간 특징

구분	대조군	처치군 1	처치군 2	처치군 3
성별	0.530	0.497	0.483	0.523
연령	3.073	3.180	3.173	3.257
교육수준	1.963	1.943	1.963	1.963
가구원 수	2.830	2.733	2.750	2.837
월 가구소득	4.940	4.823	4.997	4.907
농업재해보험 정책 인식수준	1.847	1.767	1.817	1.867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인식수준	2.193	2.010	2.050	2.133
농업재해보험 정책 필요성	4.077	4.070	4.157	4.080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필요성	4.163	4.257	4.237	4.140
농업재해보험 정책 효과성	3.930	3.847	3.950	3.880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효과성	4.023	4.010	4.023	3.957
농업재해보험 정책 지지의향	3.997	3.923	4.007	4.007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지지의향	4.060	4.027	4.063	4.040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2.873	2.843	2.843	2.943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2.960	2.943	2.947	3.013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2.897	2.863	2.890	2.947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3.953	3.960	3.960	3.973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4.117	4.177	4.113	4.167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3.863	3.977	3.977	4.023
농업재해보험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3.717	3.750	3.850	3.770
농업재해보험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3.860	3.847	3.950	3.947
농업재해보험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3.683	3.777	3.830	3.747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3.843	3.867	3.887	3.813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3.923	3.967	3.980	3.957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3.717	3.860	3.803	3.820
표본 수	300	300	300	300

주: 수치는 평균을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

3.3. 설문 결과

본 설문조사에서는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 농업 소득 변동에 관한 인식,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관한 인식,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인식,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 등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3.3.1. 농업 소득 변동에 관한 인식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최근 농가의 농업 소득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혀 알지 못함’에 대한 답변 비율이 14.8%로 응답자 대부분은 농업 소득 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농업 소득 변동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업 소득 변동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농업 소득 변동성에 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6〉 농업 소득 변동에 관한 소비자 인식

구분		사례 수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전체		(1,200)	14.8	33.5	42.5	9.2
성별	남성	(610)	15.4	34.6	38.9	11.1
	여성	(590)	14.2	32.4	46.3	7.1
연령대	20대	(189)	18.5	37.0	38.1	6.3
	30대	(218)	21.1	36.2	32.1	10.6
	40대	(251)	18.3	34.7	38.2	8.8
	50대	(283)	13.8	32.9	44.9	8.5
	60대	(259)	4.6	28.2	56.0	11.2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75)	14.9	30.3	46.3	8.6
	대졸	(900)	15.7	34.6	41.4	8.3
	대학원 졸업	(125)	8.8	30.4	44.8	16.0

(계속)

구분		사례 수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238)	16.8	42.4	33.6	7.1
	300만~500만 원 미만	(366)	14.8	31.4	44.5	9.3
	500만~700만 원 미만	(269)	15.6	34.6	41.3	8.6
	700만 원 이상	(327)	12.8	28.4	47.7	11.0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

응답자를 대상으로 농업 소득 변동이 농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혀 알지 못함’에 대한 답변 비율이 11.7%로 응답자 대부분은 농업 소득 변동이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농업 소득 변동과 농산물 생산 감소의 관계성

구분		사례 수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전체		(1,200)	11.7	28.9	48.7	10.8
성별	남성	(610)	13.0	29.2	44.6	13.3
	여성	(590)	10.3	28.6	52.9	8.1
연령대	20대	(189)	12.2	28.0	50.3	9.5
	30대	(218)	16.5	31.2	41.7	10.6
	40대	(251)	13.1	32.7	41.4	12.7
	50대	(283)	12.4	26.9	52.7	8.1
	60대	(259)	5.0	26.3	56.0	12.7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75)	13.7	28.6	47.4	10.3
	대졸	(900)	10.8	30.0	49.2	10.0
	대학원 졸업	(125)	15.2	21.6	46.4	16.8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238)	14.3	36.6	40.8	8.4
	300만~500만 원 미만	(366)	10.7	27.3	52.5	9.6
	500만~700만 원 미만	(269)	8.6	34.6	48.0	8.9
	700만 원 이상	(327)	13.5	20.5	50.8	15.3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

3.3.2.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관한 인식

응답자를 대상으로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혀 알지 못함’에 대한 답변 비율이 48.1%, ‘들어본 적은 있음’에 대한 답변 비율이 34.7%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전체		(1,200)	48.1	34.7	15.4	1.8
성별	남성	(610)	42.1	37.4	17.9	2.6
	여성	(590)	54.2	31.9	12.9	1.0
연령대	20대	(189)	50.8	31.7	15.3	2.1
	30대	(218)	54.1	32.1	11.9	1.8
	40대	(251)	51.8	28.7	17.5	2.0
	50대	(283)	50.2	33.9	14.5	1.4
	60대	(259)	35.1	45.6	17.4	1.9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75)	45.7	37.1	16.6	0.6
	대졸	(900)	50.1	32.7	15.7	1.6
	대학원 졸업	(125)	36.8	45.6	12.0	5.6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238)	55.9	31.9	10.5	1.7
	300만~500만 원 미만	(366)	45.9	36.3	16.4	1.4
	500만~700만 원 미만	(269)	50.9	34.2	14.1	0.7
	700만 원 이상	(327)	42.5	35.2	19.0	3.4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

농업재해보험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혀 알지 못함’에 대한 답변 비율이 42.8%, ‘들어본 적은 있음’에 대한 답변 비율이 35.3%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농업재해보험 정책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9〉 농업재해보험 정책에 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전체		(1,200)	42.8	35.3	18.4	3.4
성별	남성	(610)	37.9	37.0	20.3	4.8
	여성	(590)	48.0	33.6	16.4	2.0
연령대	20대	(189)	55.0	28.6	13.2	3.2
	30대	(218)	53.2	31.2	12.8	2.8
	40대	(251)	51.4	29.1	15.9	3.6
	50대	(283)	35.7	43.1	18.4	2.8
	60대	(259)	24.7	41.3	29.3	4.6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75)	36.6	37.7	22.9	2.9
	대졸	(900)	45.0	34.3	17.3	3.3
	대학원 졸업	(125)	36.0	39.2	20.0	4.8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238)	50.4	31.1	15.5	2.9
	300만~500만 원 미만	(366)	40.7	36.6	18.9	3.8
	500만~700만 원 미만	(269)	43.1	36.8	18.6	1.5
	700만 원 이상	(327)	39.4	35.8	19.9	4.9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혀 알지 못함’에 대한 답변 비율이 22.7%, ‘들어본 적은 있음’에 대한 답변 비율이 48.1%,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 대한 답변 비율이 26.2%로 농업재해보험 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0〉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에 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전체		(1,200)	22.7	48.1	26.2	3.1
성별	남성	(610)	19.3	47.5	28.9	4.3
	여성	(590)	26.1	48.6	23.4	1.9
연령대	20대	(189)	33.9	38.6	23.8	3.7
	30대	(218)	29.8	43.1	24.8	2.3
	40대	(251)	29.1	45.8	22.7	2.4
	50대	(283)	16.3	56.5	24.7	2.5
	60대	(259)	9.3	52.1	34.0	4.6

(계속)

구분		사례 수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75)	24.6	47.4	25.7	2.3
	대졸	(900)	23.6	48.0	25.4	3.0
	대학원 졸업	(125)	13.6	49.6	32.0	4.8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238)	30.3	48.7	16.8	4.2
	300만~500만 원 미만	(366)	24.6	47.3	26.5	1.6
	500만~700만 원 미만	(269)	20.4	52.4	24.9	2.2
	700만 원 이상	(327)	16.8	45.0	33.6	4.6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3.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에 관한 인식

농업재해보험이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관한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효과 있음’에 대한 답변 비율이 48.8%, ‘매우 효과 있음’에 대한 답변 비율이 23.1%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농업재해보험이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농업재해보험 정책 효과성에 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전혀 효과 없음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전체		(1200)	0.9	3.0	24.2	48.8	23.1
성별	남성	(610)	1.3	4.3	26.1	46.6	21.8
	여성	(590)	0.5	1.7	22.2	51.2	24.4
연령대	20대	(189)	0.5	4.2	30.7	50.3	14.3
	30대	(218)	2.3	2.8	27.1	48.2	19.7
	40대	(251)	1.2	3.2	28.7	41.4	25.5
	50대	(283)	0.4	3.2	20.5	50.9	25.1
	60대	(259)	0.4	1.9	16.6	53.3	27.8

(계속)

구분		사례 수	전혀 효과 없음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75)	0.0	4.0	28.0	36.0	32.0
	대졸	(900)	1.0	2.8	24.0	51.7	20.6
	대학원 졸업	(125)	1.6	3.2	20.0	46.4	28.8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238)	0.8	2.9	28.6	42.9	24.8
	300만~500만 원 미만	(366)	0.8	3.0	26.0	46.7	23.5
	500만~700만 원 미만	(269)	0.7	2.6	21.2	53.9	21.6
	700만 원 이상	(327)	1.2	3.4	21.4	51.4	22.6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이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관한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효과 있음’에 대한 답변 비율이 50.5%, ‘매우 효과 있음’에 대한 답변 비율이 26.9%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이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효과성에 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전혀 효과 없음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전체		(1200)	1.1	1.8	19.7	50.5	26.9
성별	남성	(610)	1.3	3.1	21.6	48.5	25.4
	여성	(590)	0.8	0.5	17.6	52.5	28.5
연령대	20대	(189)	1.1	1.6	25.9	51.9	19.6
	30대	(218)	2.8	3.7	25.2	49.1	19.3
	40대	(251)	0.8	1.6	19.5	48.6	29.5
	50대	(283)	0.4	1.4	17.7	51.2	29.3
	60대	(259)	0.8	1.2	12.7	51.7	33.6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75)	0.0	2.3	22.3	45.7	29.7
	대졸	(900)	1.2	1.6	20.0	51.6	25.7
	대학원 졸업	(125)	1.6	3.2	13.6	49.6	32.0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238)	0.8	2.1	23.5	51.3	22.3
	300만~500만 원 미만	(366)	1.4	1.4	20.2	51.4	25.7
	500만~700만 원 미만	(269)	0.7	1.5	17.1	52.0	28.6
	700만 원 이상	(327)	1.2	2.4	18.3	47.7	30.3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이후 진행된 효과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농업경영체 소득안정을 위해 효과적일 것이라는 답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마련을 통하여 정책을 홍보할 경우 정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4.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소비자 인식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간접적 효과인 사회적 기능 중 국가 식량안보 확보에 관한 소비자 동의 수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동의함’에 대한 답변 비율이 44.6%, ‘매우 동의함’에 대한 답변 비율이 28.3%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국가 식량안보 확보 기능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농업 소득변동완화 정책의 국가 식량안보 확보에 관한 소비자 인식

구분	사례 수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200)	1.5	1.9	23.8	44.6	28.3	
성별	남성	(610)	2.5	2.3	26.7	42.0	26.6
	여성	(590)	0.5	1.5	20.7	47.3	30.0
연령대	20대	(189)	1.6	4.2	27.0	50.8	16.4
	30대	(218)	3.2	0.9	35.3	39.0	21.6
	40대	(251)	1.2	1.6	24.3	42.6	30.3
	50대	(283)	1.1	1.1	20.8	43.8	33.2
	60대	(259)	0.8	2.3	14.3	47.5	35.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75)	0.6	1.7	28.6	37.1	32.0
	대졸	(900)	1.3	2.0	23.7	46.2	26.8
	대학원 졸업	(125)	4.0	1.6	17.6	43.2	33.6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238)	1.3	2.1	26.1	42.4	28.2
	300만~500만 원 미만	(366)	1.1	2.5	22.7	47.3	26.5
	500만~700만 원 미만	(269)	1.9	0.7	25.7	40.9	30.9
	700만 원 이상	(327)	1.8	2.1	21.7	46.2	28.1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간접적 효과인 사회적 기능 중 식품 물가안정에 관한 소비자 동의 수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동의함’에 대한 답변 비율이 43.2%, ‘매우 동의함’에 대한 답변 비율이 37.8%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식품 물가안정 기능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식품 물가안정에 관한 소비자 인식

구분		사례 수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200)	1.1	2.2	15.8	43.2	37.8
성별	남성	(610)	1.8	3.0	18.7	40.3	36.2
	여성	(590)	0.3	1.4	12.9	46.1	39.3
연령대	20대	(189)	1.1	1.6	25.4	39.2	32.8
	30대	(218)	2.3	3.7	18.8	42.2	33.0
	40대	(251)	1.6	2.0	14.3	43.0	39.0
	50대	(283)	0.7	1.1	14.5	44.9	38.9
	60대	(259)	0.0	2.7	9.3	45.2	42.9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75)	1.1	1.7	18.3	37.1	41.7
	대졸	(900)	0.9	2.4	15.6	44.2	36.9
	대학원 졸업	(125)	2.4	0.8	14.4	44.0	38.4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238)	0.8	1.3	18.5	45.0	34.5
	300만~500만 원 미만	(366)	1.4	3.0	18.0	41.5	36.1
	500만~700만 원 미만	(269)	0.7	1.9	12.6	45.4	39.4
	700만 원 이상	(327)	1.2	2.1	14.1	41.9	40.7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간접적 효과인 사회적 기능 중 농촌사회 유지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소비자 동의 수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동의함’에 대한 답변 비율이 46.3%, ‘매우 동의함’에 대한 답변 비율이 27.8%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농촌사회 유지 기능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농촌사회 유지에 관한 소비자 인식

구분		사례 수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전체		(1200)	1.5	3.0	21.3	46.3	27.8
성별	남성	(610)	2.1	4.1	24.8	44.6	24.4
	여성	(590)	0.8	1.9	17.8	48.1	31.4
연령대	20대	(189)	1.1	4.2	29.6	47.1	18.0
	30대	(218)	2.8	5.0	25.7	42.7	23.9
	40대	(251)	2.0	2.0	21.1	44.2	30.7
	50대	(283)	0.4	2.1	18.4	50.2	29.0
	60대	(259)	1.5	2.3	15.1	46.7	34.4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75)	0.6	4.0	22.3	41.1	32.0
	대졸	(900)	1.7	2.9	21.4	47.3	26.7
	대학원 졸업	(125)	1.6	2.4	19.2	46.4	30.4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238)	0.8	2.1	24.8	45.4	26.9
	300만~500만 원 미만	(366)	1.6	3.6	21.3	47.0	26.5
	500만~700만 원 미만	(269)	1.5	3.3	21.2	47.2	26.8
	700만 원 이상	(327)	1.8	2.8	19.0	45.6	30.9

자료: 설문조사 원시자료.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관한 소비자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중요성 인식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을 통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분석 결과

4.1.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4.1.1. 농업재해보험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인 농업재해보험 정책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표 1-16>과 <표 1-17>은 농업재해보험 정책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 금액 추정을 위한 추정식 결과를 보여준다. 지불의사 금액 추정 결과의 일관성 확인을 위하여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한 결과와 포함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농업재해보험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므로 소득과 경제적 가치의 이론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재해보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를 위하여 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 사회적 기능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가 국가 식량안보 확보에 긍정적이라고 동의하는 응답자일수록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에, 식품 물가안정에 긍정적이라고 동의하는 응답자일수록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재해보험이 각 사회적 기능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응답자일수록 정책에 대한 사회적 기능에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만, 농촌사회 유지에 대한 사회적 기능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경우,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를 위하여 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가 농촌사회 유지 및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동의하는 응답자일수록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이 국가 식량안보 확보와 농촌사회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응답자일수록 정책에 대한 사회적 기능에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만, 식량안보 확보에 대한 사회적 기능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6〉 농업재해보험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경제적 가치

구분	변수 미포함		변수 포함	
	계수 값	표준오차	계수 값	표준오차
성별	-	-	-1,947.76	3,489.72
연령	-	-	-343.05	1,272.80
교육수준	-	-	-3,156.05	3,505.25
가구원 수	-	-	-712.00	1,638.64
월 가구소득	-	-	2,107.53***	755.53
농업재해보험 정책 인식수준	-	-	5,219.96**	2,202.19
농업재해보험 정책 필요성	-	-	1,289.24	3,434.41
농업재해보험 정책 효과성	-	-	3,309.99	3,277.58
농업재해보험 정책 지지의향	-	-	11,088.83***	3,449.61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	-	2,987.63	3,538.26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	-	-979.49	4,229.05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	-	5,871.26	4,187.69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	-	6,314.07*	3,398.53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	-	-8,613.99**	3,428.93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	-	4,303.41	3,540.89
농업재해보험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	-	867.84	3,605.30
농업재해보험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	-	3,013.85	3,267.33
농업재해보험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	-	7,616.32**	3,405.36
상수항	33,795.45***	1,910.89	-111,203.00***	14,589.81
log likelihood	-1,559.500		-1,449.394	
표본 수	1,200		1,200	

주: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표 1-17〉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경제적 가치

구분	변수 미포함		변수 포함	
	계수 값	표준오차	계수 값	표준오차
성별	-	-	2,838.51	3,634.12
연령	-	-	1,543.55	1,325.17
교육수준	-	-	0.60	3,675.28
가구원 수	-	-	-343.11	1,713.71
월 가구소득	-	-	1,827.75**	790.81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인식수준	-	-	4,418.99*	2,594.6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필요성	-	-	-1,139.58	3,726.38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효과성	-	-	-2,620.80	3,669.14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지지의향	-	-	15,901.17***	3,754.55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	-	2,763.92	3,700.10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	-	285.08	4,391.55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	-	9,571.38**	4,281.13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	-	5,536.24	3,602.58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	-	-4,430.85	3,653.07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	-	4,434.25	3,617.49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	-	7,444.24*	3,929.61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	-	-2,378.79	3,632.31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	-	4,748.11	3,557.99
상수항	37,906.6***	1,997.1	-130,129.30***	15,531.39
log likelihood	-1,565.510		-1,448.520	
표본 수	1,200		1,200	

주: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각 정책에 대한 추정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표 1-18>은 농업재해보험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보여준다. 결과의 일관성 확인을 위하여 변수를 포함한 결과와 포함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농업재해보험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식량안보 확보, 식품물가 안정, 농촌사회 유지)에 대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액은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약 33,795원, 변수를 포함한 경우 약 33,538원으로 나타났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경우,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식량안보 확보, 식품물가 안정, 농촌사회 유지)에 대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액은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약 37,907원, 변수를 포함한 경우 약 37,574원으로 나타났다.

<표 1-18> 정책별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액(원)

구분	농업재해보험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변수 미포함	변수 포함	변수 미포함	변수 포함
연평균 WTP	33,795.45*** (1,910.89)	33,537.96*** (1,757.95)	37,906.6*** (1,997.09)	37,573.71*** (1,827.25)
표본 수	1,200	1,200	1,200	1,200

주: ***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4.1.2. 소비자 특성에 따른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정책의 시행 배경인 농업경영체 소득변동의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따른 소비자 가치의 이질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심각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과 ‘들어본 적은 있음’에 응답한 소비자를 심각성 인식이 낮은 그룹, ‘어느 정도 알고 있음’과 ‘매우 잘 알고 있음’에 답변한 소비자를 심각성 인식이 높은 그룹으로 설정하고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추정하였다.

<표 1-19>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의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차이에 따른 소비자 가치의 이질적 차이를 보여준다. 소비자 가치 추정을 위한 추정식 결과는 부록<부표 1-1~1-2>에 첨부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의 평균 소비자 가치는 약 31,092원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의 평균 소비자 가치는 약 36,093원으로 분석되었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경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의 평균 소비자 가치는 약 34,282원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의 평균 소비자 가치는 약 39,594원으로 분석되었다.

농업 소득 변동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따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이 제공하는 간접적 효과에 대한 가치가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약 16.1%,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의 경우 약 15.5%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농업경영체 소득변동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약 52.0%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만이 농업 소득 변동이 심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과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알리는 것이 정책 시행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9> 농업 소득 변동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지불의사액(원)

구분	농업재해보험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인식 낮음	인식 높음	인식 낮음	인식 높음
연평균 WTP	31,092.43*** (2,872.08)	36,092.62*** (2,853.95)	34,281.66*** (3,039.18)	39,594.09*** (2,850.41)
표본 수	580	620	580	620

주: ***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따른 관련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경제적 가치 차이를 확인하였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과 ‘들어본 적은 있음’으로 응답한 소비자를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그룹, ‘어느 정도 알고 있음’과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답변한 소비자를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은 그룹으로 설정하고 소비자 가치를 추정하였다.

<표 1-20>은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차이에 따른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보여준다. 소비자 가치 추정을 위한 추정식 결과는 부록<부표 1-3~1-4>에 첨부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완화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의 평균 소비자 가치는 약 31,979원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완화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의 평균 소비자 가치는 약 38,878원으로 분석되었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경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완화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의 평균 소비자 가치는 약 37,139원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완화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의 평균 소비자 가치는 약 40,266원으로 분석되었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 향상에 따른 소비자 가치는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약 21.5%,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의 경우 약 8.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0〉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인식 정도에 따른 지불의사액(원)

구분	농업재해보험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인식 낮음	인식 높음	인식 낮음	인식 높음
연평균 WTP	31,979.19*** (1,932.29)	38,878.38*** (9,506.09)	37,139.39*** (1,934.54)	40,265.54*** (10,112.99)
표본 수	993	207	993	207

주: ***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정책별 효과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따른 관련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경제적 가치 차이를 확인하였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에 대해 ‘전혀 효과 없음’, ‘효과 없음’, ‘보통’으로 응답한 소비자를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그룹, ‘매우 효과 있음’과 ‘효과 있음’으로 답변한 소비자를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그룹으로 설정하고 소비자 가치를 추정하였다.

<표 1-21>은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차이에 따른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보여준다. 소비자 가치 추정을 위한 추정식 결과는 부록<부표 1-5~1-6>에 첨부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의 평균 소비자 가치는 약 29,212원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의 평균 소비자 가치는 약 36,527원으로 분석되었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경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의 평균 소비자 가치는 약 30,962원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의 평균 소비자 가치는 약 39,700원으로 분석되었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식 향상은 농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가 약 25.0%,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의 경우 소비자 가치가 약 28.2%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에 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은 관련 정책이 제공하는 간접적 효과인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 인식에 따른 지불의사액(원)

구분	농업재해보험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인식 낮음	인식 높음	인식 낮음	인식 높음
연평균 WTP	29,212.41*** (5,309.82)	36,527.36*** (2,252.02)	30,961.92*** (7,710.94)	39,700.21*** (2,160.06)
표본 수	337	863	271	929

주: ***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4.2. 경제성 분석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간 총 경제적 가치와 정책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의 비교를 통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정책이 30년간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경제적 가치 및 비용을 현재가치로 산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임성일 외, 2016)의 지침 내용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였다.

<표 1-22>는 정책별 2024년 가구 수 기준 연간 총편익을 나타낸다. 농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간 총편익은 753,449,923천 원,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간 총편익은 845,105,623천 원으로 나타났다.

〈표 1-22〉 연평균 지불의사액 및 2024년 기준 연간 총편익(가구 수 기준)

구분	농업재해보험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변수 미포함	변수 포함	변수 미포함	변수 포함
연평균 WTP(원)	33,795.45*** (1,910.89)	33,537.96*** (1,757.95)	37,906.6*** (1,997.09)	37,573.71*** (1,827.25)
가구 수 (2024년 기준)	22,294,419	22,294,419	22,294,419	22,294,419
2024년 기준 연간 총편익(천 원)	753,449,922.6	747,709,332.6	845,105,623.3	837,684,034.1

주: ***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실시한 경제적 가치는 재화적 특성으로 가치 환산에서 가구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따라서 <표 1-22>에서 측정된 총편익은 가장 보수적인 수치임을 분명히 밝힌다.

본 분석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경제성 분석의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지침에 따라 분석 기준연도,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공통적인 분석 방법을 편익과 비용에 적용하였다. 경제성 분석 기법으로는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B/C Ratio),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등이 보편적으로 이용된다.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로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text{편익-비용 비율(B/C Ratio)}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여기서 B_t : t기간의 편익, C_t : t기간의 비용, r : 사회적 할인율, n : 분석연도

순현재가치(NPV)는 각 연도의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으로, NPV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text{순현재가치(NPV)}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여기서 B_t : t기간의 편익, C_t : t기간의 비용, r : 사회적 할인율, n : 분석연도

본 분석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으로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예산 중 농업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2025년 기준 예산과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

통효율화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예산 중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운영을 위한 2025년 기준 예산을 활용하였으며, 이 예산이 30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분석에서 가구 수 변화를 고려한 30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경제적 편익을 환산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 자료를 활용한다.²⁾

<표 1-23>은 농업재해보험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이 제공하는 부수적인 효과인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구 수 기준 30년간의 총편익과 편익의 현재 가치를 보여준다. 또한 각 정책 운용을 위해 필요한 총비용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보여준다.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기준 편익-비용 비율은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0.99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경우 1.026로 나타나 경제성 기준 1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경제성 분석 결과(가구 수 기준)

단위: 천 원

구분		농업재해보험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편익	총편익	24,021,350,094.6	26,943,500,071.6
	현재가치	13,544,144,262.2	15,191,762,763.6
비용	총비용	24,057,870,000	26,087,760,000
	현재가치	13,650,346,046	14,802,098,089.5
경제성	B/C	0.992	1.026
	NPV	-106,201,783.8	389,664,674.1

자료: 저자 작성.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부수적인 효과인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정책 운용 비용 대비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였다. 또한 가장 보수적인 가구 수 기준 경제적 가치 환산에서도 편익-비용 비율이 1에 근접하였다.

2)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장래인구 및 장래가구추계’ 자료는 2022년부터 2052년까지 우리나라 가구 수를 추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년 기간(2024~2053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환산하기 위하여 2053년, 장래 가구 추계는 2052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국가데이터처(각 연도),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4.3.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정보에 따른 소비자 가치 변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식량안보 확보, 식품 물가안정, 농촌사회 유지)에 관한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 가치 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4.3.1.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 가치 변화에 대한 기초통계량 분석

<표 1-24>와 <표 1-25>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보제공에 따른 대조군과 처치군의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대조군 대비 처치군별 통계적 평균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소비자 가치 환산을 위한 추정식 결과는 부록<부표 1-7~1-10>에 제시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 중 식량안보 확보 및 농촌사회 유지에 관한 정보가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경우,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 중 식량안보 확보 및 농촌사회 유지에 관한 정보가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재해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 물가안정과 관련한 정보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 물가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보제공은 경제적 가치 향상에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는 우리나라 식량안보, 식품 물가 및 농촌 붕괴 등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만,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제공에 따른 세금 지불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4〉 정보제공에 따른 그룹별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치 변화(농업재해보험)

구분		대조군	처치군 1	처치군 2	처치군 3
변수 미포함	소비자 가치 (표준오차)	33,276.68 (4,073.038)	36,165.52 (3,492.321)	30,006.54 (3,642.571)	35,920.53 (4,172.813)
	chi2-통계량 (p-value)	-	0.29 (0.590)	0.36 (0.549)	0.21 (0.650)
변수 포함	소비자 가치 (표준오차)	33,329.73 (1,916.315)	35,607.15 (1,549.656)	29,676.39 (1,535.924)	35,735.93 (1,833.194)
	t-통계량 (p-value)	-	-0.924 (0.355)	1.487 (0.137)	-0.907 (0.364)

주: chi2-통계량 및 t-통계량은 대조군 대비 처치군별 평균 차이를 보여줌.
자료: 저자 작성.

〈표 1-25〉 정보제공에 따른 그룹별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치 변화(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구분		대조군	처치군 1	처치군 2	처치군 3
변수 미포함	소비자 가치 (표준오차)	39,733.66 (3,763.061)	38,318.38 (4,111.034)	32,626.28 (4,183.803)	40,829.37 (4,011.485)
	chi2-통계량 (p-value)	-	0.06 (0.799)	1.60 (0.206)	0.04 (0.841)
변수 포함	소비자 가치 (표준오차)	39,146.25 (1,964.192)	38,196.41 (1,467.676)	31,995.18 (1,987.633)	40,431.76 (1,888.528)
	t-통계량 (p-value)	-	0.387 (0.698)	2.559** (0.011)	-0.472 (0.637)

주: chi2-통계량 및 t-통계량은 대조군 대비 처치군별 평균 차이를 보여줌.
자료: 저자 작성.

4.3.2. 정보제공에 따른 소비자 가치 변화에 대한 조건부 분석

비조건부 기초통계량 분석의 경우, 그룹별 응답자 특성 차이가 있을 때 명확한 정보효과를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 특성을 고려한 회귀분석을 이용한 조건부 분석을 통하여 정보효과 결과를 확인한다.

<표 1-26~1-27>은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보 제공 따른 소비자 가치 변화와 관련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통제변수가 포함된 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기능 중 식량안보 확보와 관련한 정보제공은 경제적 가치를 약 3,385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식품 물가와 관련한 정보제공은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경우,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사회적 기능 중 식품 물가안정과 관련한 정보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6〉 정보제공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사회적 기능 가치 변화

구분	변수 미포함		변수 포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처치 1	2,277.41	2,464.48	3,385.72***	1,009.94
처치 2	-3,653.34	2,455.87	-6,114.1***	891.40
처치 3	2,406.2	2,651.95	877.73	1,177.04
성별	-	-	-1,682.75**	738.05
연령	-	-	-259.20	267.33
교육수준	-	-	-3,245.3***	805.92
가구원 수	-	-	-681.25*	373.44
월 가구소득	-	-	2,196.52***	154.74
농업재해보험 정책 인식 수준	-	-	5,405.94***	476.08
농업재해보험 정책 필요성	-	-	1,804.49**	724.84
농업재해보험 정책 효과성	-	-	3,534.84***	774.79
농업재해보험 정책 지지의향	-	-	10,832.5***	899.27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	-	2,321.55**	896.62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	-	-800.40	1,013.15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	-	5,546.13***	981.37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	-	6,476.58***	901.74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	-	-8,859.3***	840.24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	-	4,326.65***	863.12
농업재해보험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	-	1,140.43	952.53
농업재해보험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	-	2,812.11***	802.31
농업재해보험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	-	8,152.5***	886.49
상수항	33,329.7***	1,916.31	-113,394.8***	3,037.43
R-squared	0.006		0.831	
표본 수	1,200		1,200	

주: ***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표 1-27〉 정보제공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사회적 기능 가치 변화

구분	변수 미포함		변수 포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처치 1	-949.83	2,451.96	-24.58	1,086.88
처치 2	-7,151.07**	2,794.41	-7,691.7***	1,124.62
처치 3	1,285.51	2,724.81	-59.49	1,069.06
성별	-	-	2,805.61***	841.03
연령	-	-	1,639.75***	301.04
교육수준	-	-	-190.55	855.01
가구원 수	-	-	-332.96	392.48
월 가구소득	-	-	1,763.50***	183.61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인식수준	-	-	4,421.94***	613.58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필요성	-	-	-1,431.33	942.89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효과성	-	-	-2,272.57**	979.93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지지의향	-	-	15,850.8***	1,091.40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	-	2,908.6***	869.89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	-	-7.39	1,107.53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	-	9,509.7***	1,099.93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	-	6,201.9***	990.08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	-	-5,522.9***	1,045.55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	-	5,123.13***	988.97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	-	7,226.95***	1,120.15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	-	-2,257.47**	995.79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	-	4,522.13***	956.62
상수항	39,146.2***	1,964.19	-126,908.8***	3,418.23
R-squared	0.010		0.819	
표본 수	1,200		1,200	

주: ***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 중 식량안보 확보와 관련한 정보는 농업재해보험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련 정책에 관한 홍보 및 교육에서 식량안보 확보와 관련한 객관적 효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식품 물가안정과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가 식품 물가에 민감한 상황에서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세금을 지불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소비자 대상 설문을 바탕으로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추정하고 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와 관련한 정보제공이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정책인 농업재해보험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추정을 위해 1,200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이용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건부 가치평가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유인일치적이고, 통계적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을 활용하여 소비자 가치를 추정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는 가구당 연평균 약 33,795원,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는 가구당 연평균 약 37,907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 기준 2024년 기준 연간 총편익은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753,449,923천 원,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간 총편익은 845,105,623천 원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부수적인 효과인 사회적 기능에 대

한 경제적 가치는 정책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대비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부수적인 기능만으로 정책 운용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 가치 이질성을 분석한 결과, 농업 소득 변동성을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일수록,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을 알고 있는 소비자일수록,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효과성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일수록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정책의 적극적 활용은 관련 정책의 국민적 선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가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효과 분석을 위하여 1,2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책의 사회적 긍정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무작위로 응답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선호 변화를 분석하였다.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식량안보 효과와 관련한 정보는 농업재해보험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전략 마련에 있어서 정책의 식량안보 확보와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식품 물가안정과 관련한 정보의 경우, 두 정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련 정보 활용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 록 1

〈부표 1-1〉 농업 심각성 인식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경제적 가치

구분	인식 낮음		인식 높음	
	계수 값	표준오차	계수 값	표준오차
성별	-13,316.37***	5,060.74	8,110.18*	4,856.78
연령	-1,486.95	1,906.88	280.49	1,735.18
교육수준	2,619.45	5,270.97	-7,108.61	4,664.76
가구원 수	818.49	2,292.83	-1,437.27	2,333.06
월 가구소득	1,567.29	1,111.29	2,180.88**	1,029.82
농업재해보험 정책 인식수준	8,683.40**	3,862.39	1,517.70	2,877.65
농업재해보험 정책 필요성	1,950.95	4,866.89	-717.01	4,892.29
농업재해보험 정책 효과성	1,028.10	4,816.85	6,102.25	4,493.07
농업재해보험 정책 지지의향	11,428.10**	4,789.66	11,203.46**	4,892.58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1,092.01	4,638.11	3,667.24	5,522.31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5,313.00	5,784.11	2,971.21	6,246.43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8,582.64	5,915.62	3,857.44	5,948.23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6,154.43	4,865.12	7,279.56	4,771.31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5,351.96	4,985.47	-11,406.70**	4,750.74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349.75	5,214.94	6,493.98	4,822.73
농업재해보험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8,191.56	5,474.62	-3,812.55	4,847.17
농업재해보험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3,591.44	4,951.11	6,110.86	4,354.03
농업재해보험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6,762.25	5,006.80	8,063.86*	4,656.25
상수항	-104,068.6***	20,625.19	-107,589.1***	22,380.40
log likelihood	-669.420		-769.630	
표본 수	580		620	

주: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2〉 농업 심각성 인식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경제적 가치

구분	인식 낮음		인식 높음	
	계수 값	표준오차	계수 값	표준오차
성별	-9,168.32*	5,525.76	12,111.44**	4,861.35
연령	2,572.42	2,079.32	482.75	1,729.91
교육수준	9,880.34*	5,830.61	-5,894.33	4,706.94
가구원 수	274.39	2,529.65	-906.29	2,329.60
월 가구소득	1,537.72	1,222.76	1,601.59	1,033.24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인식수준	5,481.94	4,313.27	2,704.75	3,385.80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필요성	-6,142.97	5,410.02	2,770.23	5,148.54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효과성	-1,649.09	5,238.20	-2,090.74	5,134.67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지지의향	14,160.66***	5,341.89	17,636.89***	5,250.86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624.27	5,087.25	5,477.37	5,531.31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844.99	6,243.28	253.62	6,251.88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10,968.25*	6,291.72	6,661.99	5,891.99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8,120.36	5,240.26	3,058.80	5,033.30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3,400.59	5,486.43	-4,580.71	4,910.10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2,603.07	5,695.57	5,503.50	4,683.47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12,189.11**	6,105.88	6,361.19	5,221.21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4,456.64	5,735.71	-2,184.04	4,703.85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600.41	5,692.60	6,430.09	4,547.25
상수항	-120,793.3***	22,565.50	-133,267.5***	23,355.36
log likelihood	-670.261		-767.760	
표본 수	580		620	

주: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3〉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인식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경제적 가치

구분	인식 낮음		인식 높음	
	계수 값	표준오차	계수 값	표준오차
성별	-6,491.17*	3,674.80	23,765.61**	10,089.57
연령	442.98	1,354.77	-1,594.24	3,654.28
교육수준	-3,183.99	3,686.05	-3,119.21	9,984.44
가구원 수	-2,082.10	1,734.86	7,090.47	4,725.48
월 가구소득	1,835.60**	803.81	3,602.71*	2,054.29
농업재해보험 정책 인식수준	2,667.89	2,723.21	235.94	7,538.32
농업재해보험 정책 필요성	1,596.20	3,579.97	-9,253.64	10,496.67
농업재해보험 정책 효과성	1,655.59	3,454.17	15,854.59*	9,657.39
농업재해보험 정책 지지의향	12,143.16***	3,654.57	11,475.61	9,810.81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3,710.58	3,566.50	-8,771.08	13,404.27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5,464.22	4,321.89	28,782.94**	15,228.45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8,208.81*	4,305.97	-9,858.54	13,976.33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9,622.32**	3,713.34	-5,337.50	9,016.52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8,514.9**	3,745.32	-6,450.25	9,109.39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747.93	3,871.14	19,995.99**	9,660.56
농업재해보험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2,870.22	3,856.64	20,996.17**	10,036.69
농업재해보험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5,227.45	3,491.03	-9,583.30	9,018.57
농업재해보험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9,816.68***	3,729.29	266.71	8,851.62
상수항	-93,956.63***	15,248.63	-175,299.7***	47,956.32
log likelihood	-1,182.26		-246.431	
표본 수	993		207	

주: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4〉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인식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 경제적 가치

구분	인식 낮음		인식 높음	
	계수 값	표준오차	계수 값	표준오차
성별	-1,950.98	3,776.05	25,618.06**	11,576.95
연령	2,094.10	1,378.05	-1,326.68	4,204.73
교육수준	2,245.50	3,795.95	-10,091.79	11,824.45
가구원 수	-1,742.04	1,792.62	8,232.76	5,565.05
월 가구소득	1,705.51**	829.74	2,030.64	2,477.96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인식수준	4,970.96*	2,946.53	-7,343.71	10,093.34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필요성	-1,013.92	3,847.03	-2,598.18	12,213.08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효과성	-2,754.89	3,820.31	3,848.82	11,559.91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지지의향	14,100.94***	3,931.11	27,658.91**	12,095.59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1,851.22	3,671.46	9,968.02	15,205.10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65.63	4,409.67	-4,294.16	17,800.67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8,436.91**	4,315.06	15,235.31	16,151.33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11,552.33***	3,860.59	-19,041.12*	11,012.81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4,500.33	3,882.55	-5,805.94	10,498.50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1,226.11	3,907.43	14,862.88	10,905.49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6,907.77*	4,162.01	19,033.16	11,882.8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4,020.42	3,788.99	-2,068.91	11,847.17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4,300.27	3,814.14	4,500.76	10,404.23
상수항	-117,645.2***	15,847.04	-184,479***	58,901.07
log likelihood	-1,185.092		-243.772	
표본 수	993		207	

주: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5〉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 인식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경제적 가치

구분	인식 낮음		인식 높음	
	계수 값	표준오차	계수 값	표준오차
성별	-19,830.48**	7,649.99	3,323.89	3,928.60
연령	-3,258.53	2,882.94	247.43	1,419.76
교육수준	-2,572.98	7,789.92	-2,098.52	3,945.02
가구원 수	-3,177.78	3,578.73	-257.92	1,853.24
월 가구소득	1,804.95	1,711.66	1,929.71**	845.79
농업재해보험 정책 인식수준	9,452.82*	5,188.45	4,541.88*	2,422.00
농업재해보험 정책 필요성	9,481.02	6,083.49	-3,395.27	4,168.49
농업재해보험 정책 지지의향	9,722.75	6,144.08	12,298.7***	4,001.47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7,764.36	7,927.25	2,152.45	3,962.77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19,529.76**	9,296.52	3,910.44	4,807.33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19,428.25**	9,018.56	2,241.48	4,753.40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10,045.34	6,760.68	4,928.30	3,995.36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13,643.58**	6,243.15	-6,904.23	4,241.97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6,195.99	6,815.17	3,593.20	4,219.63
농업재해보험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2,191.30	6,886.85	54.46	4,263.91
농업재해보험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3,651.70	6,517.23	5,163.97	3,797.08
농업재해보험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9,917.59	6,937.87	7,402.13*	3,973.31
상수항	-99,994.78***	29,719.80	-91,582.56***	20,261.11
log likelihood	-340.162		-1,098.00	
표본 수	337		863	

주: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6〉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효과성 인식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 경제적 가치

구분	인식 낮음		인식 높음	
	계수 값	표준오차	계수 값	표준오차
성별	-13,826.94	10,235.03	5,343.14	3,915.71
연령	-2,204.34	3,792.13	2,149.21	1,420.28
교육수준	1,974.72	10,640.64	-277.08	3,912.35
가구원 수	4,136.61	4,704.20	-1,228.14	1,865.13
월 가구소득	-2,020.80	2,209.03	2,536.74***	858.40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인식수준	7,375.12	7,542.65	3,343.78	2,751.14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필요성	2,395.28	8,317.02	-3,882.97	4,280.97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지지의향	14,326.68*	8,607.98	14,159.93***	4,053.29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536.49	9,929.36	2,672.77	4,008.64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5,330.52	11,371.07	829.80	4,840.74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11,524.58	11,275.23	8,303.44*	4,662.33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5,800.01	8,958.64	6,302.05	3,980.30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1,955.60	8,435.83	-6,205.36	4,202.61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4,776.40	9,616.94	3,823.17	3,966.74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13,184.57	10,091.36	5,671.88	4,316.64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19,772.22**	9,957.25	334.12	4,015.29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10,063.25	9,774.57	3,233.17	3,830.83
상수항	-152,465.8***	39,464.65	-110,429.8***	20,119.52
log likelihood	-265.857		-1,173.48	
표본 수	271		929	

주: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7〉 농업재해보험 정보효과 분석 결과(대조군 vs 처치군 1)

구분	대조군		처치군 1	
	계수 값	표준오차	계수 값	표준오차
성별	-3,628.72	7,167.10	-6,079.34	6,610.41
연령	399.38	2,471.20	-308.73	2,287.60
교육수준	-4,748.61	7,143.73	-4,860.59	6,360.32
가구원 수	-3,772.80	3,297.52	-587.74	3,009.55
월 가구소득	3,888.88**	1,575.50	1,180.37	1,361.58
농업재해보험 정책 인식수준	1,457.35	4,453.22	8,006.24**	3,990.33
농업재해보험 정책 필요성	-3,771.12	7,384.71	4,906.77	6,349.02
농업재해보험 정책 효과성	2,859.26	6,921.20	-770.19	5,617.99
농업재해보험 정책 지지의향	22,844.42***	7,081.27	9,181.38	6,347.47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3,012.20	7,808.53	10,567.15	6,651.16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8,279.02	8,711.01	-16,587.56**	8,310.52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8,051.01	9,290.44	13,809.25*	7,650.93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1,854.50	7,111.29	16,333.33***	6,378.07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2,242.49	6,214.01	-14,665.78**	6,361.57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8,244.82	6,445.83	-5,660.66	6,784.52
농업재해보험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11,967.53*	6,583.84	-4,728.69	6,897.78
농업재해보험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2,431.37	5,927.98	8,291.20	6,125.44
농업재해보험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3,485.44	6,157.49	8,652.38	7,061.73
상수항	-131,759***	30,872.53	-70,723.72***	26,103.65
log likelihood	-349.461		-360.314	
표본 수	300		300	

주: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8〉 농업재해보험 정보효과 분석 결과(처치군 2 vs 처치군 3)

구분	처치군 2		처치군 3	
	계수 값	표준오차	계수 값	표준오차
성별	-4,980.50	6,540.58	5,759.97	7,677.55
연령	-891.42	2,528.40	670.61	2,915.67
교육수준	-9,367.68	6,626.80	4,265.19	7,918.29
가구원 수	-1,996.10	3,094.30	3,537.10	3,724.57
월 가구소득	1,629.98	1,428.79	1,873.81	1,687.49
농업재해보험 정책 인식수준	1,067.04	4,242.05	12,384.59**	4,919.86
농업재해보험 정책 필요성	2,830.41	6,068.62	-2,904.20	8,455.80
농업재해보험 정책 효과성	-414.52	6,503.33	11,558.28	7,765.63
농업재해보험 정책 지지의향	14,763.36**	6,471.24	-723.34	7,929.51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11,570.18*	6,776.87	-7,461.79	7,195.72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2,324.87	7,600.55	3,818.65	9,496.53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4,431.30	7,647.97	-903.18	9,589.90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3,922.21	6,302.09	7,176.24	7,842.20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11,105.03	7,438.04	-6,447.30	8,067.14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5,614.65	7,376.92	10,725.79	8,647.14
농업재해보험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4,365.39	7,803.74	-7,434.85	8,363.24
농업재해보험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424.50	6,572.13	5,401.57	8,301.17
농업재해보험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6,415.74	6,700.27	17,633.13**	7,942.78
상수항	-91,305.74***	27,998.29	-141,321.3***	32,320.33
log likelihood	-350.838		-358.792	
표본 수	300		300	

주: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9〉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보효과 분석 결과(대조군 vs 처치군 1)

구분	대조군		처치군 1	
	계수 값	표준오차	계수 값	표준오차
성별	-2,360.76	6,545.38	-3,415.46	7,815.17
연령	-923.55	2,267.04	1,393.45	2,817.79
교육수준	1,666.38	6,542.85	-936.78	7,778.00
가구원 수	-281.48	3,027.90	-220.88	3,655.29
월 가구소득	2,206.52	1,427.24	447.53	1,649.18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인식수준	-4,248.38	4,795.50	7,565.31	5,472.63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필요성	-4,597.10	6,657.19	-4,528.26	7,975.15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효과성	-10,840.15	6,790.90	-2,966.66	7,694.17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지지의향	30,754.28***	6,726.68	5,659.96	7,906.21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4,666.57	7,192.56	14,224.94*	8,233.13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680.19	7,978.21	-6,607.34	9,885.60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16,530.10**	8,233.02	2,497.86	9,161.23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1,564.91	6,529.59	18,045.01**	7,793.74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2,578.49	6,116.39	-15,082.27*	7,821.17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1,724.93	6,049.57	4,283.40	8,030.13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17,785.71***	6,725.39	7,282.66	8,865.8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3,882.06	6,291.64	4,812.66	7,907.86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902.97	5,894.02	-135.04	8,701.51
상수항	-120,886***	27,990.66	-71,475.96**	32,224.88
log likelihood	-348.527		-369.259	
표본 수	300		300	

주: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10〉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보효과 분석 결과(처치군 2 vs 처치군 3)

구분	처치군 2		처치군 3	
	계수 값	표준오차	계수 값	표준오차
성별	-1,420.00	7,328.34	14,683.51**	7,310.96
연령	4,204.74	2,811.74	2,088.48	2,745.06
교육수준	-9,416.04	7,469.38	6,643.35	7,456.18
가구원 수	1,334.80	3,427.07	-1,466.39	3,550.54
월 가구소득	950.00	1,573.92	3,261.37**	1,587.69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인식수준	13,543.42**	5,324.19	1,324.71	5,172.19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필요성	6,436.95	7,690.06	-8,387.43	7,823.88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효과성	8,213.35	7,613.29	-7,745.46	7,784.18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지지의향	13,249.42*	6,988.50	17,602.88*	9,009.48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인식	1,808.77	7,468.64	-5,163.11	6,724.61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식품물가 부정적 영향 인식	-6,072.52	8,519.56	8,543.58	8,824.70
농업경영체 소득불안정의 농촌사회 유지 부정적 영향 인식	12,448.14	8,208.56	5,321.06	8,719.79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동의여부	6,140.90	7,256.70	3,632.01	7,752.31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물가 안정 동의여부	-12,202.05	8,356.84	1,473.93	7,448.66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의 농촌사회 유지 동의여부	10,354.02	7,539.78	14,679.83*	8,456.84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성	-8,814.30	8,339.43	6,605.53	8,206.78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식품물가 안정 효과성	8,229.91	7,387.46	-12,843.02	8,043.91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의 농촌사회 유지 효과성	2,107.67	7,163.82	15,480.17**	7,498.87
상수항	-157,548***	33,596.64	-146,881***	30,229.03
log likelihood	-338.826		-357.573	
표본 수	300		300	

주: *, **, ***은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2025년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농업·농촌 및 농식품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민의 농업 소득변동 완화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조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 33조(비밀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7월

- 문의
-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원대학교
 - 조사대행기관 : 엠브레인리서치

A2. 귀하는 **농가의 농업 소득 변동성 증가가 농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B.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관한 인식

B1. 귀하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B1-1. 귀하는 정부에서 **농업경영체의 농업 소득변동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B1-2. 귀하는 정부에서 **농업경영체의 농업 소득변동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Prog: 페이지 나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은 **농업생산자의 소득 불안정 완화를 통해 농업 경영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 소득변동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농업재해보험 정책**과 **농산물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이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정책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험원리로 보상하여 농가 경영 및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보험 대상 농작물은 과수, 곡물(벼, 맥류), 밭작물,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작물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 조절 정책은 농업관측(주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전망), 농산물 비축(주요 농산물을 비축하여 가격 및 수급안정), 농산물 유통 및 수급 정보 조사(농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 농산물 품목별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 구축을 위한 자조금 지원(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사전적 수급 대책 등 농업생산자 이익 보호를 위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의미합니다.

B2. 귀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농업경영체 소득안정 및 안정적 농산물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분	농업경영체 소득안정 및 안정적 농산물 공급에 필요 정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필요 하다
1) 농업재해보험 정책	①	②	③	④	⑤
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①	②	③	④	⑤

B3. 귀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농업경영체 소득안정 및 안정적 농산물 공급을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구분	농업경영체 소득안정 및 안정적 농산물 공급에 미치는 효과				
	전혀 효과 없음	←	보통	→	매우 효과 있음
1) 농업재해보험 정책	①	②	③	④	⑤
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①	②	③	④	⑤

B4. 귀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농업경영체 소득안정 및 안정적 농산물 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정책을 지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정책지지 의향				
	전혀 없음	←	보통	→	매우 있음
1) 농업재해보험 정책	①	②	③	④	⑤
2)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①	②	③	④	⑤

C.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C1. 귀하는 평소 **사회/경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편입니까?**

전혀 관심 없음	←	보통	→	매우 관심 있음
①	②	③	④	⑤

C2. 귀하는 다음의 **사회/경제** 관련 이슈들이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심각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심각함
1) 식량안보/식량지급률 악화	①	②	③	④	⑤
2) 식품 물가 상승	①	②	③	④	⑤
3) 농촌사회 붕괴	①	②	③	④	⑤

C3. 귀하는 **농업경영체(농업생산자) 소득 불안정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는 국가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C4. 귀하는 농업경영체(농업생산자) 소득 불안정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는 식품 물가 상승을 통해 가계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C5. 귀하는 농업경영체(농업생산자) 소득 불안정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는 농촌사회 유지 및 국가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Prog: 페이지 나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 위협의 확대 및 농산물 가격 변동성 심화, 대내외 여건 악화(유가변동, 국제곡물가격 상승, 환율 상승, 수입물가 상승 등)로 인한 농가 경영비 위험 확대는 농업경영체의 경영 및 소득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의 소득 불확실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한 농가의 경영관리 능력을 약화시켜 농업경영체의 농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가의 농산물 생산 감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산물 생산 감소는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식량안보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농산물 생산 감소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식품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가계의 지출 불안정(지출 증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산물 생산 감소는 농촌사회 붕괴를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C6. 귀하는 평소 우리나라 농업생산 불안정으로 인한 국가 식량안보 확보의 어려움을 체감하십니까?

전혀 체감하지 못함	←	보통	→	매우 체감함
①	②	③	④	⑤

C7. 귀하는 평소 우리나라 농업생산 불안정으로 인한 식품 물가 변동을 체감하십니까?

전혀 체감하지 못함	←	보통	→	매우 체감함
①	②	③	④	⑤

C8. 귀하는 평소 우리나라 농업생산 불안정으로 인한 농촌사회의 어려움을 체감하십니까?

전혀 체감하지 못함	←	보통	→	매우 체감함
①	②	③	④	⑤

D. 농업 소득변동 완화가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

D1. 귀하는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알지 못함	들어본 적은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Prog: 페이지 나눔]

농업경영체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은 농업생산자의 소득안정이라는 직접적 효과 이외에 농가의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긍정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사회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유인하여 국가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유인하여 식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생산자 소득안정은 농촌사회 유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D2. 귀하는 농업경영체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동의하십니까?

구분	농업 소득변동 완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동의 여부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1) 국가 식량안보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식품 물가안정	①	②	③	④	⑤
3) 국가균형발전	①	②	③	④	⑤

D3. 귀하는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농업 소득변동 완화의 사회적 기능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1) 국가 식량안보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식품 물가안정	①	②	③	④	⑤
3) 국가균형발전	①	②	③	④	⑤

D4. 귀하는 농업경영체(농업생산자) 농업 소득변동 완화가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필요함
①	②	③	④	⑤

[Prog: 페이지 나눔]

농업경영체(농업생산자) 농업 소득변동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농업재해보험 정책**과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이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정책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험원리로 보상하여 농가 경영 및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보험 대상 농작물은 과수, 곡물(벼, 맥류), 발작물,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작물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 조절 정책은 농업관측(주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전망), 농산물 비축(주요 농산물을 비축하여 가격 및 수급안정), 농산물 유통 및 수급 정보 조사(농산물 수급 불만에 선제 대응), 농산물 품목별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 구축을 위한 자조금 지원(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사전적 수급 대책 등 농업생산자 이익 보호를 위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의미합니다.

D5. 귀하는 **농업재해보험 정책**이 **농업 소득변동 완화를 통한 사회적 기능 제공**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농업재해보험의 농업 소득변동 완화를 통한 사회적 기능 제공 효과성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	보통	→	매우 효과적임
1) 국가 식량안보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식품 물가안정	①	②	③	④	⑤
3) 국가균형발전	①	②	③	④	⑤

D6. 귀하는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이 **농업 소득변동 완화를 통한 사회적 기능 제공**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의 농업 소득변동 완화를 통한 사회적 기능 제공 효과성				
	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	보통	→	매우 효과적임
1) 국가 식량안보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식품 물가안정	①	②	③	④	⑤
3) 국가균형발전	①	②	③	④	⑤

D7.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귀하의 동의 수준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1) 나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하거나, 또는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위험”을 감수하기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하거나 또는 “금전적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D8.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해 귀하의 동의 수준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1) 나와 나의 가족은 농업생산자 소득변동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로 식량안보 위험, 식품 물가상승에 노출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농업생산자 소득변동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는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농업생산자 소득변동 완화를 통한 농산물 생산 안정은 국가 식량안보 확보, 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절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농업생산자 소득변동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 부작용은 현재 알려진 것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농업생산자 소득변동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 피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농업생산자 소득변동 완화를 통한 농산물 생산 안정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rog: 일렬 응답 시 경고창 제시(경고창을 제시했음에도 일렬 응답한 경우는 다음 문항 이동 가능)]

E. 농업 소득변동 완화가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질문

[Prog: Control/Treatment 그룹별 -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보 홍보에 따른 경제적 가치 변화 분석 질문입니다. E파트 '설명' 제시 내용 상이(단, control 그룹은 하단의 파란 박스만 제시하고, 그 외 관련 제시 문구가 없습니다)]

[Prog: A/B/C/D 그룹별 - EA/EB파트 '초기 가격' 상이]

■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귀댁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매년 일정액의 지출은 귀 댁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다른 용도의 지출 감소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답변은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신중히 생각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Control	Treatment 1	Treatment 2	Treatment 3
A그룹	75	75	75	75
B그룹	75	75	75	75
C그룹	75	75	75	75
D그룹	75	75	75	75
합계	300	300	300	300

[Prog: Treatment 1그룹 제시]

농업 소득변동 완화의 식량안보 확보 효과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2년 기준 49.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곡물 자급률은 20.9%로 더욱 낮으며,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의 소득 불안정은 농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식량안보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은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며, 이는 농산물 생산 안정화를 통해 국가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Prog: Treatment 2그룹 제시]

농업 소득변동 완화의 식품 물가안정 효과

우리나라 식품 물가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식품 물가는 가계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비중을 가중해 가구의 가계비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품 물가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의 소득 불안정은 농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식품 물가안정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 정책은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며, 이는 농산물 생산 안정화를 통해 식품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Prog: Treatment 3그룹 제시]

농업 소득변동 완화의 국가균형발전 효과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농가 인구는 200만 명대로 떨어져 농촌 소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의 소득 불안정은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소득변동완화 정책은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며, 이는 농촌지역 인구 유출을 감소시키고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Prog: 위 안내문구 3초 시간 제어]

[Prog: 4개 그룹별로 EA1/EB1의 초기가격을 달리 해주세요]

구분	EA1. 농업재해보험	EB1.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A 그룹	36,300원	39,300원
B 그룹	39,900원	43,300원
C 그룹	43,500원	47,200원
D 그룹	47,200원	51,200원

농업경영체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중 “농업재해보험 정책”은 자연재해 등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험원리로 보상하여 농가의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긍정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을 통한 농업경영체 농업 소득변동 완화는 다음의 사회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유인하여 국가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유인하여 식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생산자 소득안정은 농촌사회 유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rog: EA1~EA3 문항 윗부분에 상단 문구 제시]

EA1.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를 위한 정책인 **농업재해보험 정책** 수행을 위한 **가구당 비용**은 1년 기준 약 (제시금액)원/년인 것으로 예측됩니다. **농업재해보험 정책**을 통한 **농업 소득변동 완화**에 따른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귀하 가구는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를 위한 **농업재해보험 정책** 운용을 위해 세금 (제시금액)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단일응답]

1) 있음 EA2로

2) 없음 EA3으로

EA2. [EA1=1 응답자] 그렇다면, 귀하 가구는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를 위한 **농업재해보험 정책** 운용을 위해 세금 (제시금액의 2배)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단일응답]

1) 있음 EA5로

2) 없음 EA5로

[Prog: 위 안내문 별도 페이지 제시]

농업경영체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중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은 농업관측, 농산물 비축, 농산물 유통 및 수급 정보 조사, 농산물 품목별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 구축을 위한 자조금 지원,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사전적 수급 대책 등 농업생산자 이익 보호를 위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하여 농가의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긍정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을 통한 농업경영체 농업 소득변동 완화는 다음의 사회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유인하여 국가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유인하여 식품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생산자 소득안정은 농촌사회 유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Prog: EB1~EB3 문항 윗부분에 상단 문구 제시]

EB1.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를 위한 정책인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수행을 위한 **가구당 비용**은 1년 기준 약 ()원/년인 것으로 예측됩니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을 통한 **농업 소득변동 완화**에 따른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귀하 가구는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를 위한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 조절 정책 운용을 위해 세금** (제시금액)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단일응답]

1) 있음 EB2로

2) 없음 EB3으로

EB2. [EB1=1 응답자] 그렇다면, 귀하 가구는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를 위한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운용을 위해 세금** (제시금액의 2배)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단일응답]

1) 있음 EB5로

2) 없음 EB5로

EB3. [EB1=2 응답자] 그렇다면, 귀하 가구는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농업경영체 **소득변동 완화를 위한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 운용을 위해 세금** (제시금액의 1/2배)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단일응답]

1) 있음 EB5로

2) 없음 EB4로

DQ. 응답자 정보

DQ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단일응답]

- | | |
|---------------------------|------------------|
| 1) 농/임/어업 종사자 | 2) 경영/전문/사무직 종사자 |
| 3) 서비스/영업/판매직 종사자 | 4) 생산/기술/노무직 종사자 |
| 5) 공무원(경찰, 군인, 공기업 직원 포함) | 6) 자영업자 |
| 7) 프리랜서/자유직 | 8) 전업주부 |
| 9) 학생 | 10) 무직 |
| 11) 기타(_____) | |

DQ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일응답]

- | | |
|--------------------------|--------------------------|
|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 대학교(전문대학) 재학/중퇴/수료/졸업 |
| 3) 대학원(석·박사) 재학/중퇴/수료/졸업 | |

DQ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단일응답]

- | | |
|-------|-----------------|
| 1) 미혼 | 2) 기혼(이혼/사별 포함) |
|-------|-----------------|

DQ4. 귀하를 포함하여 귀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의 수**는 몇 명인가요? (군입대, 유학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제외)

연령	인원
1) 미취학(영유아)	명
2) 초/중/고등학생	명
3) 성인(본인 포함)	명
합계 (전체 가구원 수)	[자동계산] 명

[Prog: '3) 성인'은 1명 이상 응답]

[Prog: DQ3=1.미혼인 경우 1]미취학(영유아) 1명 이상인 경우 경고창 제시(경고창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명 이상인 경우는 저장해주세요)

DQ5.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세전)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일응답]

※ 월평균 가구소득(세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수입, 이자/배당금, 연금, 경조소득, 자녀/가족 등에게 받은 용돈 등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며,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세전 소득 기준으로 작성

- | | |
|--------------------|------------------|
| 1) 200만 원 미만 | 2) 200~300만 원 미만 |
| 3) 300~400만 원 미만 | 4) 400~500만 원 미만 |
| 5) 500~600만 원 미만 | 6) 600~700만 원 미만 |
| 7) 700~800만 원 미만 | 8) 800~900만 원 미만 |
| 9) 900~1,000만 원 미만 | 10) 1,000만 원 이상 |

참고문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장래가구추계.

_____ (각 연도), 장래인구추계.

김태후·김미복·김영준·채흥기·권오현(2022), 제1차 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요약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령(20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분야 재해보험 관련 법제개선방안연구(I) - 농작물재해보험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박현희(2014),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농업보험제도의 고찰”, 무역연구, 10(1): 463-483, 한국무역연구원.

임성일·송지영·박소연(2016),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형백·이성우(2004),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출판부.

최경환·채광석·윤병석(2010),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ummings, R. G. & L. O. Taylor(1999), “Unbiased value estimates for environmental goods: a cheap talk design for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merican Economic Review, 89(3): 649-665.

Fox, J. A., J. F. Shogren, D. J. Hayes & J. B. Kliebenstein(1998), “CVM-X: Calibrating contingent values with experimental auction marke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0(3): 455-465.

Hanemann, M., J. Loomis & B. Kanninen(1991),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3(4): 1255-1263.

Holmquist, C., J. McCluskey & C. Ross(2012), “Consumer preferences and willingness to pay for oak attributes in Washington Chardonnay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94(2): 556-561.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 부속 연구서

-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